

신사회운동 참여자 분석 — 누가, 왜, 어떻게 참여하는가?*

송호근**

이 논문은 신사회운동 참여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참여자들은 주로 누구이며, 그들의 동기와 참여방식은 무엇인지를 서구 경험과 비추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회원의 수준에서는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의 초기적 형태가 보이는 반면 ('약한' 인지적 동원), 실무자 수준에서는 '강한' 인지적 동원과 더불어 구사회운동에서 구축된 연줄적 동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구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인지적 동원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연고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논지이다. 의식적 동의와 자발적 동기 유발이 인지적 동원의 핵심이라면, 연고적 동원은 개인적 친분과 연고관계에 주로 의존 한다. 연고적 동원에의 의존도는 일반 회원보다 실무자들의 수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연고적 동원이 운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일반 회원의 경우, 그것은 운동참여를 소극적, 수동적으로 만드는 데 반하여, 실무자들에게는 개인적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공유한 운동경험'은 이념적 균열과 가치관의 대립까지 메ぐ어주는 일종의 연대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고적 동원은 서구사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한국적 특성이자 자산이다. 그것은 신사회운동이라는 포스트모던적 현상에 여전히 전통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며, 쟁점 중심의 이합집산을 억제하고 직업운동가들간의 끈끈한 유대를 지탱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운동단체 내부에서 이런 형태의 연고적, 개인적 네트워크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 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주요 관심분야는 노동사회학, 사회정책론, 사회학이론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지식사회학』(1990),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1991), 『열린 시장, 닫힌 정치』(1994), 『한국의 기업복지연구』(1995), 『시장과 복지정치』(1997) 등이 있다(전화: 02-880-6411, E-mail: hksong@plaza.snu.ac.kr).

가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을 권위주의적으로 만들 우려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으로, 실무자들간 노선의 차이와 이념적 대립에서 기인하는 조직활동의 마비상황과 조직의 균열을 방지해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기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네트워크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경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짐을 안고 있음을 분명하다.

1. 서론

누가 신사회운동에 참여하는가? 그들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잉글하트는 이 질문을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 개념으로 답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슈에 새로운 대안을 갖고, 정치적 토론을 통하여 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바로 인지적 동원의 내용이다 (Inglehart, 1990). 잉글하트는 신사회운동 참여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탈물질적 가치를 선호하며, 좌파지향적이며,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적 토론을 자주하며, 중산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 신사회운동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이 질문이 이 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여기서는 운동단체 실무자¹⁾와 회원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인지적 동원이 아니라 ‘연고적 동원’에 의존하고 있다. 연고적 동원이란 운동단체의 참여가 개인적 친분과 연고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연고적 동원의 정도는 실무자와 일반 회원간에 차이가 있다. 실무자들이 일반 회원보다 연고적 관계를 통하여 운동단체를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연고적 동원은 사회운동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자세를 소극적, 수동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실무자들 수준에서는 ‘이심전심’ 내지 ‘상호이해’를 고양시켜 이념적 갈등에 의한 조직의 분열을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연고적 동원은 실무자들간 개인적 신뢰를 구축해온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연고적 동원이 사회

1) 단체대표가 아니라 단체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유급, 무급의 상근자를 지칭한다.

운동에 미치는 부정적 기능을 제거하고 긍정적 발전에너지로 승화되려면 ‘개인적 네트워크의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조사자료가 활용되었다. 하나는 운동단체의 구성원에 관한 설문조사, 다른 하나는 실무자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력에 관한 설문조사이다.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운동단체의 운동상황과 조직현황, 실무자가 당면한 난제들을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초점집단조사(focus-group survey)도 병행하였다.²⁾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회원과 실무자의 인구학적, 사회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누가 신사회운동에 참여하는가를 밝히고(2절), 가입동기와 가입경로를 분석하여 그들이 ‘왜’,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3절).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아직 태동기에 놓여 있는 만큼 운동부문간의 연대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신사회운동의 운동부문들간 연대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무자들의 경력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려 한다(4절). 구사회운동이 독자적 쟁점과 정체성 확립여부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였다면, 신사회운동에는 각 운동단체들의 공동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쟁점개발과 운동단체 실무자들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5절에서는 실무자와의 인터뷰조사를 토대로 신사회운동이 처한 현실적 난관이 무엇인지를 조명할 것이다.

2. 구성원의 특성

1) 일반 회원

서구 신사회운동 참여자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주로 중간계급과 빈민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부들을 포함한 여성, 젊은 세대, 고학력층 등의 사회적 범주가 운동의 주요자원으로 꼽히고 있다(Kitschelt, 1990; Inglehart, 1990). 특히, 중간계급의 대표적 범주인 전문가집단은 기존의 전통적 정치양식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치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과 높은 친화

2) 조사방법과 그 내용에 대하여는 앞의 논문 참조.

〈표 1〉 운동부문별 회원 특성비교(%)

부문(N) 특성	여성운동 (13)	환경운동 (9)	인권운동 (8)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17)	구사회운동 (10)
전문-사무직	33.3	51.5	74.7	55.1	53.2
판매-생산직	11.8	13.8	14.5	14.3	21.6
주부	42.7	11.3	2.7	14.0	14.6
30대	11.8	25.2	21.8	13.0	9.8
40대	30.3	29.2	26.6	37.1	45.0

성을 갖는다. 이러한 서구적인 특성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동단체 일반회원의 특성을 운동부문별로 분석하였다 (〈표 1〉).³⁾

우선, 참여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신구사회운동을 막론하고 전문-사무직종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에서 사회운동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좋은 증거이다. 그러나, 더 상세히 관찰한다면, 신사회운동 참여자가 구사회운동보다 더 중산층 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판매-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구사회운동에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된다. 전문-사무직 출신의 사람들이 사회운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우리만의 독자적 특성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주부의 참여율이 지극히 낮은 것은 서구와 뚜렷이 구분된다. 주부의 참여율은 여성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42.7%)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활동통로가 다양하고 그 기회도 넓게 열려져 있는 반면, 한국의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가정 속으로 퇴장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이효선, 1997).

운동부문별 회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40대가 30대보다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신.구사회운동을 막론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30대란 직장에서의 자율성이 지극히 낮아 개인적 활동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연령이라는 점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하면 신.구사회운동의 성격이 보수화할 소지가 많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젊을수록 진보적, 개방적 성향을 가질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역별 연령분포가 이를 뒷받침한다.

3) 운동부문별 구분에 대하여는 앞의 논문 참조.

개방적, 진보적 이념과 친화성을 보이는 환경운동과 인권운동의 경우 30대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구사회운동의 경우에는 4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45%). 70년대와 80년대라면 그 사정은 달랐겠지만, 한국에서도 노동운동의 역사가 쌓이면서 노동운동가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호전적, 전투적 성향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젊은 세대일수록 포스트모던적 쟁점과 가치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발견된다. 잉글하트의 지적처럼, 젊은 세대일수록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더 경도됨을 시사하는 것이다.⁴⁾

2) 실무자

실무자는 일반회원들과는 달리 사회운동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회원이 운동의 기반이라고 한다면, 실무자들은 그 골격과 뼈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활동가로 불리는 이들은 사회운동으로 생업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사회운동과 긴밀히 연관되는 일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미래는 이들의 활동상과 직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의 특성이 앞에서 살펴본 일반회원들의 그것과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말하자면, 직업운동가들인 셈이다.⁵⁾

실무자의 연령, 종교, 학력,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의 운동단체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자 164명 중

〈표 2〉 실무자 연령 분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N)	23.8(39)	54.3(89)	16.5(27)	5.5(9)	100(164)

4) 잉글하트는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구분하면서, 전자가 경제적 물질적 풍요를, 후자는 자기표현과 삶의 질을 중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세대간에는 이 차이가 뚜렷한데, 생활주기 효과보다는 세대간 가치변화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Inglehart, 1990; 박형신 · 한상필, 1995, pp. 72-99 참조).

5) 80년대에는 권위주의정권에 도전하는 ‘직업혁명가’들이 나타났다면, ‘직업활동가’들은 민주화의 공간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을 넓히려는 90년대적 운동의 산물이다(강문규, 1996).

남자는 71명(44.1%), 여자는 90명(55.9%)으로 비교적 여성이 많았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가장 높고(54.3%), 20대(23.8%), 40대(16.5%) 순으로 나타나, 40대의 참여가 높은 일반회원과 대조를 이룬다(표 〈2〉). 직업활동가의 주요 연령층이 20대와 30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신사회운동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직결 된다는 점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다음, 실무자의 종교적 배경에서는 개신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의 주도집단이 개신교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시민사회운동에 투신하던 종교단체와 활동가들이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목적과 활동양상을 바꾸어 자연스럽게 신사회운동으로 전환하였으리라는 것을 추측케 한다(이신행, 1997; 크리스챤아카데미, 1996). 한편, 인권운동의 실무자들은 오랫동안 인권문제를 중시해온 카톨릭교와 연관된 사람들이 많아 대조를 이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새로운 쟁점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사회운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더불어 높아진다. 실무자들의 교육수준이 일반 회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실무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전부가 대졸 이상의 높은 학력을 보였으며, 환경운동단체,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 부문은 고졸 학력을 가진 실무자들도 더러 눈에 뜨였다.

서구사회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실무자들의 직업분포와 배경이다(cf. Kitschelt, 1990). 우선, 운동단체에 상근하는 직업활동가들의 전직(前職)을 살펴보면, 학생(10.1%), 사무직 회사원(8.2%), 교사와 학원강사(5.7%), 공장노동자(4.4%), 주부(1.3%)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근직원의 상당 비율이 화이트 칼라 출신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들이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운동단체에 투신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보조하고 있는 별도의 소득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 의하면, 실무자의 60%는 본인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하고 있으나 가구 평균소득은 241만원으로 나타나 실무자의 대부분은 중류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본인 이외의 소득원이 이들로 하여금 사회운동에 투신하도록 밭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⑥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6) 배우자의 직업구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남자활동가의 배우자 직업은 주로 교사, 약사, 간호사와 같이 비교적 안정적 계층이었다. 그리고 여자활동가의 배우자 직업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것은 아니다. 최근 IMF사태를 계기로 운동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운동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그 예이다. 직업활동가들이 애초에 경제적 보상을 바라고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사회운동의 명맥을 이어갈 인적자원은 쉽게 충원되지 않는다.

한편, 운동부문별 실무자의 소득분포는 자못 흥미롭다. 구사회운동단체 실무자들은 가구원의 평균소득이 낮아 중산층에 속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문 반면에, 여성운동단체 실무자들의 평균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괜찮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소득수준의 차이가 운동부문별 활동성향, 운동방식, 이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가정할 수 있겠는데, 이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3) 실무자의 직업경험

실무자들은 유급 상근직과 무급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유급상근직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운동에만 헌신하는 활동가들이며, 무급 자원봉사자는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로 겸직실무자들이다. 비교적 큰 규모의 중앙단체를 제외하면 상근직 실무자보다는 무급 자원봉사자들이 많다. 겸직실무자들의 직업은 주로 교수, 변호사, 의사, 약사, 종교인과 같은 자유전문직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상근실무자들은 교사, 간호사, 학원강사, 일반 사무직 등에서 전직한 사람들 이었다.

현직과 전직을 합하여 전문, 사무직종이 대종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신사회운동의 뚜렷한 특성일 것이다. <표 3>에 나타나듯이, 직장을 그만두고 운동에 뛰어든 실무자들의 전직 중 전문, 사무직이 대종을 차지하는 반면, 판매 및 서비스직은 극히 드물다. <표 3>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직업을 바꾸지 않은 경우(‘직업동일’) 90% 이상이 전문, 사무직으로 응답하였다. 직장을 그만둔 경우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직업 범주가 일반 회사원(8.2%), 시민사회단체(7.5%), 교사와 학원강사(5.7%), 공장노동자(4.4%), 학생(10.1%)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흥미롭다.

많았다. 이러한 분포는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의 대부분이 중산층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본인의 실제 소득은 적지만 본인의 가구원의 소득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운동단체 실무자의 현직, 전직 분포

직업	직업동일	전문직	관리직	반전문	전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민	미취업
%, N	37.4(61)	6.1(10)	4.3(7)	9.2(15)	18.4(30)	3.1(5)	1.8(3)	6.1(10)	1.2(2)	12.3(20)

직장을 그만두고 신사회운동에 뛰어든 실무자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과,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무직 종사자였다는 점은 전문성을 지향하는 신사회운동의 뚜렷한 특성이다.⁷⁾ 키트쉘트는 전문지식과 비판의식을 갖춘 활동가들을 상징전문가(symbol specialists)로 불렀다(Kitschelt, 1990).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신사회운동에 헌신하도록 이끈 계기는 물론 운동목표와의 의식적 동의(consciousness consensus)이다. 이들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에 대한 풍부한 시각을 갖춘 사람들이이다. 그리하여,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갖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특히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기존의 운동이념과 방식의 구태의연함에 불만을 느끼고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운동영역에 헌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최근에 그 활동이 두드러지는 정보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소비자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 등에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가 대거 참여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3. 참여 형태: ‘연고적 동원’

사회운동의 활성화에는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필수적이다. 잉글하트가 말하는 ‘인지적 동원’ 개념에는 활동가들의 동원전략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쟁점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시민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사회운동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신사회운동을 ‘쟁점의 정치’(issue politics)로 규정하는 시각은 바로 이런 전략적 동원과 자발적 호응의 상호결합이 운동의 관건임을 전제한다(Dalton 외, 1990).⁸⁾

7) 서구사회에서 활동가들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분석으로는 Kitschelt(1990) 참조.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 동원과 자발적 참여의 결합은 더욱 중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한국의 사회운동, 특히 신사회운동적 성격을 띠는 운동은 ‘엘리트중심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강문규, 1995; 김성국, 1996; 김영래, 1997).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단계에서 엘리트중심의 운영방식은 필수적 과정이겠지만, 한국의 사회운동이 시민사회 내부로 그 기반을 확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명망가 중심의 쟁점개발과 홍보에 머물게 되는 이유는 시민들을 단지 동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지난 날의 오랜 관습 때문일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인 소위 관변단체의 활동방식과 관의존성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욕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사회운동을 명실공히 ‘시민이 있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최근 여러 운동단체에서 시도되고 있기는 하다. ‘시민사회 뿌리내리기’, ‘참여하는 회원상 정립’, ‘1인 1회원 확보운동’, ‘회원자치모임 활성화’ 등의 명칭을 내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운동의 실상은 어떠한가? 시민들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활동가들이 충원되는 통로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지적 동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객관적 사회쟁점, 조직적 네트워크, 동기유발, 참여에 필요한 정치적 숙련(potitical skill) 등 네 가지 요소가 혼합된 것이다. 이 중에 정치적 숙련의 과정은 개인의 문제의식이 운동적 차원으로 진전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공유된 문제의식을 사회적 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상호적 의무감이 정치적 표출의 통로와 기술을 습득해나가는 과정을 인지적 동원이라고 정의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사회적 영역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강한 동기유발과 자발적 참여행위가 수반된다(Inglehart, 1990).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하려면 강제적인 동원보다는 다양한 참여기제를 통한 정치적 숙련과정이 필요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반 회원과 실무자들의 가입경로와 충원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우회적으로나마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8)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사회운동의 정치는 계급 내지 집단에 기초한 정치균열(group-based political cleavages)이 아니라 ‘쟁점에 기초한 균열’(issue-based cleavages)을 특징으로 한다.

1) 일반 회원의 가입 경로

그런데, 일반 회원들의 가입경로에 대한 분석은 인지적 동원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운동단체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연 혹은 지연을 통한 면식관계’(회원권유, 55%)와, 과거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의 ‘단체설립’(33%)이 가장 빈번한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이나 실무자가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회원권유’와 ‘창립’을 합해 거의 90%에 근접한다. 이에 반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토론회 등 인지적 동원의 요건에 부합하는 통로는 지극히 미미하다. 면식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는 없으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개인적 교류관계가 형성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다시 말해 문제의식의 공유를 통하여 회원간의 유대가 형성되는 것과, 회원간의 유대가 먼저 만들어지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이다(Gamson and Meyer, 1996). 이를 단순화하면, 신사회운동단체들은 과거의 운동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연줄망(personal networks)에 기초한 동원전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인지적 동원’에 대비하여 ‘연고적 동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목표와 활동방향, 이념 등을 홍보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동기유발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른바 ‘시장기제적 동원’(market mobilization)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면식관계에 의존한 동원전략을 버리고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체들이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이 주로 선호하고 있는 홍보수단은 언론매체와 인터넷이다.⁹⁾ 매스콤과 인

9) 최근에 ‘환경운동연합’은 일반 기업처럼 라디오광고를 활용하여 회원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몇몇 운동단체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단체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시도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인터넷에 최신 정보를 계속 올려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소수의 단체들도 이 작업을 외부 전문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처럼 통신공간을 단체의 주 업무영역으로 삼고 있는 특수한 예도 있다.

〈표 4〉 회원들의 가입경로

경로	사업참여	회원권유	언론매체	토론회	기타(창립멤버)	무응답	총계
% (N)	5.0(8)	55.3(89)	3.7(6)	1.2(2)	32.9(53)	1.9(3)	100(161)

질문: “귀하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운동단체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터넷은 의외로 커다란 홍보효과를 선사하고 있는데, 일례로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았던 참여연대는 설립 초기 회원 수가 628명이었던 것이 3년 후인 98년에는 2,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99년에는 3,000명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일반회원들의 참여가 부족한 운동단체는 실무자들의 친목모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발적 참여가 결여되면 운동단체의 생존요건인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 원론적 견해이지만, 비정부기구(NGO)는 운동단체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이들이 내는 기부금과 회비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의 결여는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로 하여금 활동능력의 소진과 재정악화의 악순환에 봉착하도록 만든다. 정부는 운동단체의 지원에 있어 과거보다 훨씬 개방적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부문화의 부재도 운동단체의 재정적 영세성을 부추기는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한다.¹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운동단체들 자체에 내재한다. 즉 회원중심의 프로그램과 참여문화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예를 든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주로 개인적 연줄을 동원한 회원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면식자원이 소진됨과 동시에 운동단체의 조직적 성장도 중지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연고적 동원의 양상은 자발적 참여의 통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는 실무자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10) 권위주의정치 하에서 법적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던 단체들도 최근 정부로부터 합법적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 예컨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그 동안 단체설립에 있어 장애요소로 지목받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도 ‘등록’이라는 용어 대신 ‘신고’로 변경되었다. 또한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운동연합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운동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영래, 1997).

2) 실무자들의 가입경로

실무자들의 가입경로를 보면, 일반 회원과는 달리 창립멤버로 참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 대신, 거의 대부분이 과거 운동동지들의 권유(84.1%)가 가장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5.6%)와 토론회 참석(2.8%) 등의 인지적 동원요인은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운동의 충추를 구성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과거 사회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로 충원되고 있으며, 이를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운동단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실무자의 수준에서 연고적 동원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의외의 사실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사회운동단체들과 활동가들이 겪었던 어두운 경험들을 기억한다면 그리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정치적 탄압과 사찰이 가해지는 경우 사회운동은 활동가들간의 '개인적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적 신뢰는 운동을 지속하는 데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상쇄시켜준다. 지하운동이나 점조직으로 관철되는 저항운동에서 이념의 공유보다는 개인적 신뢰가 중시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탄압과 사찰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개인적 연고를 통하여 운동단체를 선택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연고적 동원'에 의한 실무자들의 충원이 과연 사회운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념적 공유가 더욱 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적 신뢰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약화되기 마련이다. 또는 연고적 관계가 권위적, 서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과 홍보 등의 조직 활동에 있어 의견대립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 해결의 가능성은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장점도 있다. 쟁점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기 쉬운 조직의 분열을 개인적 신뢰와 '과거의 동지애'로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연고적 동원이 회장단과 참모진 수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문제는 대단히 흥미롭지만 별도의 연구로 미루어둔다.

한편, 연고적 동원의 정도는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사례수가 적어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언론매체'나 '사업참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사례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더 많은 자료분석을 통

〈표 5〉 실무자들의 연령별 가입경로

연령 경로 \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사업참여	8(7.4)	4	3	1	—
운동동지권유	90(84.1)	17	57	12	4
언론매체	6(5.6)	3	3	—	—
토론회	3(2.8)	1	1	—	1
계	107(100)	25	64	13	5

질문: “귀하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운동단체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여 이런 경향이 확증된다면, 그것은 ‘인지적 동원’의 짐증을 예견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연고적 관계를 거부할 성향이 많아진다고 가정하면, 향후 사회운동의 실무자 충원에 있어 연고적 동원은 차츰 약화되고 동기 유발에 의한 자발적 참여와 혁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운동부문별 분석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무자들의 평균연령이 비교적 낮은 환경운동은 실무자 충원에 있어 언론과 매스콤을 활용하는 성향이 많은 반면, 다른 운동부문은 연고적 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의 운동동지들끼리 일종의 ‘헤쳐모여식’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운동부문간 실무자들의 특정한 이동패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부문은 과거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여성운동은 성불평등, 성희롱, 성차별 등의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면서 여성노동운동가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한 영역이다.

〈표 6〉은 실무자들의 충원이 연고적 동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다른 차원에서 보여준다. 즉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유형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30%가 연고적 관계를 지적하였으며(학교, 고향, 직장), 24.2%는 타운동단체에서의 활동경험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하여 ‘전혀 관계없다’고 지적한 사람은 32.3%에 불과하여 기존의 면식관계, 연고, 공통경험 등의 요인이 실무자들의 단체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런 관계유형이 나이트하르트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고 부른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Neidhardt, 1985). 신사회운동은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의 긴밀한 네트

워크로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나이트하르트는 개인적 연고보다는 이념의 동질성 또는 강령의 친화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국이 경우, 학연과 지연, 직장관계등의 연줄에 의존한 연고적 동원방식이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이념적 동질성을 증대하는 데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부정적 관점에서, 연고적 동원은 사회운동단체로 하여금 ‘이념적 동료집단’ 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친목 집단’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 운동조직 내에서 연고적 관계에 내재한 권위주의적, 비합리적 요소가 사회운동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긍정적 관점에서, 연고적 동원은 실무자간 개인적 신뢰의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해주기 때문에 이념적 갈등과 정책적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조직와해를 피하게 해준다. ‘조직의 지속성’이 운동의 핵심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연고적 동원은 운동성과와는 무관하게 운동단체의 명맥을 잇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타운동단체’에서의 공통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탄압이 존재하는 경우, 운동의 동지애는 혈육보다 더 진한 체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험의 공유를 통한 동원’은 과거의 동지라는 구태의연함을 숨기고는 있지만 조직 내부의 사사로운 갈등을 초월하여 이념적 지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상호이해의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있는 셈이다(McAdam, McCarthy, Zald, 1988, 1996).

분석적 관점에서, ‘연고’ (또는 네트워크)를 두 가지 속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갖는 ‘개인적 네트워크’ (personal network)와, 이것이 사회적 평면으로 확장되었을 때 비교적 객관적 의미를 띠게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가 그것이다. ‘연고적 동원’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행위인데, 이 경우 개인적 네트워크가 사유화되면 (privatized) 앞에

〈표 6〉 실무자들간의 관계

관계없음	학교	연고적 관계 고향	직장	타운동단체	기타	무응답
% (N)	32.3(52)	26.7(43)	1.9(3)	1.2(2)	24.2(39)	10.6(17)

질문: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자 중 기존에 알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서 지적한 부정적 기능이 커지는 반면, 사회적 규범의 통제를 거쳐 사회화되면 (socialized) 긍정적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어찌 보면 개인적 네트워크는 우리사회에 특유한 한국적 자산이다. 이것이 신사회운동의 발전에너지가 되려면 개인적 네트워크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personal network) 과정이 필요하다. 운동부문간 연대 (solidarity)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이다. 실무자들간에 존재하는 ‘개인적 차원’의 상호이해가 ‘조직적 차원’으로 확대될 때, 그리고 개인적 네트워크의 사회화가 뒷받침될 때 운동부문간 강한 연대감이 형성된다. 이것이 다음 절의 관심사이다.

4. 운동부문간의 연대가능성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아직 태동기에 놓여 있는 만큼 운동부문간의 상호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서구의 경우에도, 신사회운동 단체들이 하나의 공통된 쟁점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벌이면서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 종교단체가 인권문제 및 노동권 확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교육단체가 교육주권운동으로부터 소비자주권운동으로 나가는 것이 그 예이다. 사회운동의 쟁점이 하나로 모이기 어렵고 시민들의 관심이 여러 방면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이런 통합적 연대활동은 대단히 커다란 전략적 효과를 창출한다. 더욱이 운동단체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역량이 부족한 신생조직일 경우 공통 쟁점을 중심으로 한 연대전략은 단체의 기반확대에 기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영국의 평화운동이 좋은 예이다(Rochon, 1990). 반전, 반핵, 군비축소, 민족적 자존심 등의 가치를 내거는 평화운동의 지향이념은 반전단체, 환경단체, 노동단체, 여성단체들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유형의 것이어서, 신사회운동의 구심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로콘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에 평화운동의 1/3은 평화운동단체가 주관한 것이었지만, 1985년이 되면 노동조합, 전문가단체, 여성단체들이 그 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되었다. 신사회운동을 다중조직의 장(multi-organizational field)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Klandermans, 1992). 구사회운동이 독자적 쟁점 개발과 정체성의 확보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다면, 신사회운동은 연대활동을 통하여 성장한다. 거스필드의 표현을 빌면, 구사회운동은 ‘선형성의 속

성' (trait of linearity)을 갖는 반면, 신사회운동은 유체성적 속성(trait of fluidity)을 갖는다(Gusfield, 1981).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은 시민의식의 고양과 운동기반의 확대를 위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운동부문간 연대활동의 가능성은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국적 쟁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높아진다. 예를 들면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이 발생하여 식수원을 더럽히고 국민위생을 위협하였을 때 환경연합과 소비자단체간의 긴밀한 연대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여기에 노동조합이 가세하여 주범기업의 비도덕적 행위를 고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다. 핵폐기물처리장과 댐건설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지역환경단체, 학생과 주부연합체, 반핵단체 등의 협력적 연대운동도 좋은 예일 것이다(구도완, 1996; 박재목, 1995).

구사회운동의 전형인 노동운동과 어느 정도의 친화감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운동부문별로 친화감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조돈문, 1996a, 1996b). 조돈문은 서울에 근거를 둔 전국적 수준의 대표적 운동단체를 대상으로 노동운동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여성운동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조직적 관점과 실무자 관점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조직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운동단체들이 과거에 여성노동운동이 목표로 하던 쟁점을 신사회운동적 가치관으로 대거 수용하여 핵심적 운동 강령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적 관점에서는 활동가들의 이념적 동질성과 연속성을 들 수 있다. 과거 여성노동운동에서 활약하던 많은 사람들이 여성운동단체의 실무자로 변신한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운동영역간 '상호이해'의 개연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환경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은 노동운동이 시민 일반의 복지향상이라는 보편적 목적보다는 조합원만을 위한 배타적 목표를 추구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실무자들간 상호이해의 정도가 떨어진다. 그리하여 적어도 중앙수준에서, 환경단체와 노동단체간 연대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운동부분간 연대활동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나이트 하르트가 주목했던 '이념적 동질성' (또는 '강령의 친화성'), 다른 하나는 운동단체

실무자들의 ‘상호이해’의 정도. 개별참여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 글은 두 가지 지표 중에서 주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운동부문들에 대한 실무자들의 ‘상호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럿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각 운동부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친화감을 갖고 있는가, 다른 운동단체의 실무자들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 공동행사를 얼마나 자주 개최하는가, 또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운동단체는 몇 개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단체인가 등등을 물어보는 것이다.¹¹⁾ 이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경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력은 곧 실무자들의 운동경험을 말해주는 데, 운동경험이야말로 이해의 수준을 가름하기에 좋은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연대활동을 촉진하는 ‘선호’ (preference)인지 아니면 그것을 위축시키는 ‘혐오’ (abhorrence) 인지를 정확히 측정하지는 않았다는 흠이 있으나, 운동실무자들이 실제로 선택해온 경력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호’에 가깝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¹²⁾

〈표 7〉은 설문분석의 결과인데, 이로부터 몇 가지 해석을 끌어내면, 첫째, 응답자의 경력은 ‘운동단체’ (66%)와 ‘사무전문직’ (34%)으로 대별된다. 사무전문직이 34%에 달한다는 점은 비교적 안정된 수입이 있는 중산층, 고학력자로 이루어진 신

〈표 7〉 실무자들의 경력조사

(단위: 명, %)

경력범주 운동부문	④ 목표가 동일한 운동단체	⑤ 목표가 다른 운동단체	사무, 전문직	운동단체경력자 (④+⑤/계)	계
여성운동	2	6	11	42.1%	19
환경운동	4	5	4	69.2%	13
인권운동	7	3	5	66.7%	15
정의, 복지운동	10	7	9	65.4%	26
구사회운동	10	12	5	81.5%	27

질문: “현재의 운동단체에 참여하기 이전 귀하의 주요 경력은 무엇이었습니까?”

11) 노동조합의 연결망구조에 대한 연구가 그 좋은 예이다. 김용학·송호근(1997) 참조.

12) 조사대상 운동단체(97)에 각각 2부씩, 총 165개의 개인용 질문지를 우송한 결과, 100명이 자신
의 경력을 밝혀주었다. 응답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비슷한 운동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할 만한 경력상의 변화가 없
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특성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운동단체’가 66%를 점하는 것은 꽤나 만한 일이다. 이 중 목표가 유사한 단체(33%)와 목표가 다른 단체(33%)가 절반씩 분할된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의 실무자들 중 1/3 정도가 다른 운동부문에서 이미 활동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는 타운동부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든 영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거 몸담았던 부문과 현재의 부문에 대한 상호이해는 갖추고 있을 것이다.

둘째, 운동단체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비율이 부문별로 차이가 난다. 여성운동에서 경력자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42.1%), 환경, 인권, 정의 및 복지운동은 65-70%, 구사회운동은 8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운동의 실무자들은 ‘새로운 인물’이 태반이며, 구사회운동은 ‘과거의 인물’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운동이념의 진보성, 개혁성, 전문성에 각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도의 연구로 미루어둔다. 다만 구사회운동의 실무자들이 사회운동에 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가장 높을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아마 운동의 역사가 길고, 그만큼 운동경력이 쌓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운동부문간 실무자 경력에도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를 갖기는 어렵겠으나 대체적인 추세만을 읽어보면, 여성운동, 환경운동, 구사회운동의 실무자들은 대체로 다른 부문의 단체로부터 이동해온 경우가 많은 반면, 인권운동과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은 부문 내에서의 이동이 보다 잦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차이가 운동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더 많은 자료에 근거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¹³⁾

실무자들의 경력분석으로부터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실무자 중 2/3 정도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갖고 있으며, 1/3은 목표를 달리하는 사회운동에서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 이는 실무자들 사이에 운동부문들에 대한 상호이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를

13)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단히 활발하게 운동영역을 이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연합과 같은 재야운동단체에서 활동하던 재야운동가가 사회정의운동단체의 실무자가 된 경우, 종교인으로서 사회문제의 개선에 뛰어든 복지운동가, 역시 사회문제로 관심을 바꾼 전직 노동운동가, 소비자운동에 뛰어든 농민운동가, 학생운동 출신의 민주청년운동가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연합한 교육운동, 공공선 실현을 위한 전문가단체 운동 등도 증가하고 있다. 실무자들의 활발한 영역이동과 운동영역의 중첩현상은 곧 연대활동의 기반이 된다.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해석한다면, 운동부문들간 ‘상호연대’의 조건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것이 연대활동의 필수요건인 이념적 동질성 또는 강령의 친화성으로 발현되려면, 개인적 네트워크를 사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모든 운동단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통적 쟁점 개발이 필요하다.

5. 신사회운동의 당면문제: 세 가지 쟁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의 분석은 사회운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운동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들과 활동가들의 생생한 체험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운동단체들의 조직현황과 구성원의 특성은 사회운동의 현실과 전망을 가름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객관적 지표이다. 이 지표들이 리얼리티를 획득하려면 실무자들의 현장체험과 문제의식이 부가되어야 한다. 운동단체의 현장실무자들은 무엇을 운동의 촉진 혹은 장애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들은 한국의 사회운동에 대하여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가? 이 절에서는 운동단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의 현장목소리를 재정확보, 조직화, 정치화의 세 가지 문제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¹⁴⁾

1) 재정확보

실무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역시 재정확보의 문제이다. 사회운동단체들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자체 수익사업,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기타의 소득으로 이루어진다. 민주화가 한창 진행되고 경기가 좋았던 90년대 초중반기에 운동단체들의 재정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 할수록 운동단체를 지원하려는 시민들의 의욕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운동단체를 위한 재정자원은 거의 고갈되었다

14) 전국적으로 알려진 중요 사회운동단체를 몇 개 선별하고, 이 단체에서 사무국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의 직위를 가진 활동가들과 인터뷰하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단체들은 향후 회비감소와 여타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하였는데, 경제사정이 더 악화되면서 상근직 보수까지 채불해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때로는 자신의 봉급을 반납하여 재정적자를 완화하려는 실무자들의 애처로운 노력도 엿보이지만, IMF사태로 인한 재정자원의 고갈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어려움은 최근 설립된 단체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운동단체의 재정악화는 실무자들의 의욕을 꺾고, 급기야는 조직활동을 마비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Jenkins and Klandermans, 1995). 재정악화의 문제가 실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전문직 종사자이면서 반상근 활동을 하는 실무자들(겸직실무자)은 생계수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유급 상근실무자들에 비하여 사정이 나은 편이다. 회원 구성에 있어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종교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도 실무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벼운 편이다. 그래서 YMCA, YWCA, 가톨릭 및 기독교재단 등이 후원하는 단체와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 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재정적자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한 실무자는 상근직 활동가로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단체활동을 위하여 빚을 지는 경우도 불가피해졌다면서 '재정악화'를 사회운동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하였다.

재정악화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운동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운동의 목적'과 '단체의 생존'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기부금을 둘러싼 마찰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기업기부금은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운동단체에 단기적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기부금이 오염물질을 몰래 방출하여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힌 업체로부터 나온 것이고, 기부대상이 그 기업을 감시해야 할 환경단체일 경우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언론의 이기주의적 성향과 편파보도를 감시하면서 언론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단체활동을 전개하는 역설적 상황도 벌어졌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견해도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기업기부금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반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국 활동의 폭을 제약하고 급기야는 운동의 명분 까지 망가뜨리는 독소로 보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어 이들이 납부하는 회비에 기대를 거는 방법이다. 그러나 운동의 방향모색과 전략수립 등 전문성을 요하는 과제가 산적한 시점에서 조직의 기반확대와 재정문제에 온갖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이 실무자들을 낙담시킨다. 특히 전국 수준의 방대한 조직을 가진 단체일수록 실무자들은 전문성을 살려야할 과제 이외의 잡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단체의 행정직원으로 전락한 듯한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무자들은 운동단체와 일반 시민을 연결하는 중개자이면서 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현장감독과 같다. 이들의 입지와 자율적 공간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사회운동의 전망을 밝게 만드는 첨경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당면하여 실무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운동목적과 현실간의 괴리감, 전문성의 결여, 정체성 위기 등 쉽지 않은 난제에 당면해 있다.

2) 조직기반의 확대

사회운동은 조직기반을 필요로 한다. 이른바 ‘조직적 공간’의 수직적, 수평적 연대야말로 운동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이다(McCarthy, 1996; Kriesi, 1996). 한국의 사회운동이 중앙집중주의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리더쉽의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민적 참여가 결여된 채 사회적 쟁점에 따라 명망가들의 형식적 연대활동이 사회운동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은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한국의 사회운동 형태를 연고주의, 패권주의, 지역이기주의로 특징짓고 있다. 연고주의란 활동가들이 자신의 이념내지 신념보다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동지애 또는 학연, 지연 등의 연고적 명분에 의하여 단체 참여를 결정하는 모습을 지칭하며, 패권주의란 서울중심주의 내지 영향력있는 단체의 정책방향에 종속되는 경향을, 지역이기주의는 운동의 보편적 목적보다는 지역의 특수한 이익에 사로잡히는 경향을 각각 지칭한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조직기반의 확대를 저해하고 동시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연대기구(협의체, 연합체)의 결성은 중앙수준에서 가장 쉽게 관찰되는 조직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시민적 참여가 뒷받침되는 조직적 역량을 결하게 된다. 그 결과 소위 ‘언

'론플레이'로 불리는 언론활용 방식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명망가 중심의 연대활동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성명서 발표, 대책회의와 연대회의 구성 등과 같은 일시적 운동방안은 별 어려움없이 전개되는 반면, 일반 회원들은 연대의 명분, 과정, 정책 등등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과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이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강도높은 동기유발이 결여된 상충조직 수준의 연대는 생명력이 오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운동을 명망가들의 친목모임으로 만들 소지를 안고 있다. 신사회운동을 '영향의 정치'라고 부르는 것처럼, 언론활용은 신사회운동의 기반확대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적 참여의 결여를 메꾸는 방식의 언론활용은 참여를 희망했던 시민들조차 사회운동에 회의감을 갖도록 만든다(Johnston and Klandermans, 1995).

이런 관점에서 운동단체의 실무자들이 언론에 대하여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언론은 사회운동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의 폐단 역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쟁점의 정치'를 본질로 하는 신사회운동에 있어 언론은 '필요악'이다.

사회운동의 연대활동이 상충 수준에서의 이합집산에 국한될 때 사회운동에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의 중앙편중 현상이 불가피하게 초래된다. 이런 형태의 사회운동에 대한 실무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부정적이다. 명망가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명망가의 일회적, 형식적, 전략적 연대가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점점 더 그 중심에서 소외되고 운동의 명분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연대활동은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에서 신사회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연대활동은 협력작업이며 일의 분담이다. 공동목표와 노동분업이 없는 연대활동은 형식적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한 실무자는 연대활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환경문제가 쟁점화될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환경운동단체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여성운동단체가 최전선에서 쟁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여타 운동단체들은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등의 협력작업이 있어야 지자체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패권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약화되지 않고 운동단체의 리더쉽이 시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통제받지 않는 한 행사 위주의 현시적 운동경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더 절실한 것은 운동지도자들간의 연대활동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동단체들의 공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쟁점 개발일 것이다.

3) 운동의 정치화

신사회운동은 정치화를 전제하는가? 그것은 소위 새로운 정치(new politics)로 발전해야 하는가?(Hilderbrandt and Dalton, 1978). 이 질문은 서구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유럽에서 신사회운동은 급진정당의 결성을 촉진하였다. 그렇다고 신사회운동을 지향하는 급진정당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녹색당과 스웨덴의 환경당처럼 대부분 군소정당으로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사회운동의 가치가 높이 외쳐졌을 때 신사회운동가들은 여세를 몰아 곧 거대정당을 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정치적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아서 중앙무대로 진입한 신정치정당 가운데 거대정당을 결성하는 데에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¹⁵⁾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정치화의 성공여부보다 정당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신사회운동의 본질이 현실정치의 장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과정에 관한 문제이다. 신사회운동의 생명은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추구에서 찾아진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독일의 녹색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개발’과 ‘환경보존’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을 행해야 한다. 즉 이념의 순수성과 새로운 가치관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정치의 법칙이다. 정치화의 딜레마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한국의 신사회운동에도 이런 유사한 쟁점이 발견된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신사회운동의 정치화에 비판적 태도를 견

15) 1980년대 유럽 12개국에서 결성된 녹색정당 가운데 8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멀러-롬멜이 조사한 35개의 신정치정당 가운데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은 20개에 달했다. 그러나 중앙무대에서 거대정당을 결성한 예는 없다(Mueller-Rommel, 1990). 라쉬케는 신정치정당을 ‘탈산업적 준거정당’으로 부른다(Raschke, 1983).

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 뿌리를 둔 신사회운동의 본연적 의미를 지켜나갈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활동가들의 정치적 진출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단체와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사회운동을 정치입문의 수단과 창구로 활용하려는 태도에 대하여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화에 대한 입장에서 운동부문별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은 자못 흥미롭다. 예를 들면 여성운동단체의 실무자들은 단체 지도자들의 정계입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의 철폐가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보면 운동지도자들의 정치입문이야말로 그것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터이다.

반면 환경운동,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단체의 실무자들은 사회운동과 정치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두고 싶어 한다. 파당의 이익을 떠나 공공선의 실현을 도모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정부나 기업행위에 대하여 가차없는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몇몇 실무자들은 사회운동조차 권력투쟁의 대리영역으로 화할 만큼 지나치게 '정치화' 되어 있음을 개탄한다.

신사회운동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운동의 시민사회적 기반이 약한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과 정치간의 경계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제도권 정치로의 진출을 위해 39명의 후보를 지방선거에 출마시켰던 환경운동연합의 예에서 보듯이, 신사회운동의 정치화 노력은 꾸준히 전개될 듯이 보이지만, 정당정체성이 취약하고 정권교체기마다 정당의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한국의 정치현실 속에서 신사회운동의 정치화 문제는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다.

6. 요약 및 토론

활동가와 일반 회원에 관한 분석은 신사회운동의 성격과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권위주의체제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포스트모던적 현상으로 규정되는 신사회운동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어줍잖고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비판도 설득력이 있지만, 구사회운동의 목표와 가치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자장 속에서 신사회운동적 쟁점으로 변환되어 나타나는 것은 한

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미완으로 남아 있는 구사회운동적 가치와 문제의식을 두루 포괄하고 물질적 이해관심에 기초한 정치적, 사회적 균열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혁명 혹은 집합 행동에 관한 전통적 연구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계급성원들의 일상생활과 사고양식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같이,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과 단체형성의 계기를 분석하는 것은 신사회운동의 내부 기제를 파악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신사회운동의 주요 참여자들이 대체로 사무, 전문직 종사자들이며, 중산층에 속하고, 고학력자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서구사회와 마찬가지이다. 연령별로는 일반 회원의 경우 4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실무자들은 20대와 30대의 젊은층이 더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운동단체의 살림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사회운동이 생계의 터전이자 삶의 현장인 직업활동가들이다. 그런 만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에 헌신한 경험이 있고 개인적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무자들의 2/3가 대학졸업후 주로 운동단체에서 경력을 쌓아왔다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1/3에 달하는 사무, 전문직 출신의 실무자들도 이전 직장을 사회운동에 헌신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기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이 한국의 신사회운동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중심집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의 활동가들이 이른바 좌파-자유주의(left-libertarianism)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키트렐트가 묘사하였듯이 서구사회에서 활동가들은 시장, 부의 축적, 성취윤리에 대한 불신과 평등주의적 재분배를 전통적 사회주의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좌파’이며, 개인적, 집합적 행위를 규제하는 사적, 공적 관료제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다(Kitschelt, 1990). 이 연구에서는 단지 진보적, 개방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그쳤지만, 한국의 활동가들의 이념적 성향이 좌파자유주의에 가깝다는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많다. 우선 그들이 직간접으로 권위주의정권의 탄압을 경험한 결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더 절실하게 추구하게 된 되었다는 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이에 형성된 강한 저항문화가 활동가들의 직업윤리 형태로 전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경제적 불평등, 독점, 권위, 억압, 강제 등등의 부정적 항목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이미 주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좌파자유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미지수이다.

서구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인지적 동원을 특징으로 하는 데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연고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논지이다. 의식적 동의와 자발적 동기유발이 인지적 동원의 핵심이라면, 연고적 동원은 개인적 친분과 연고 관계에 주로 의존한다. 연고적 동원에의 의존도는 일반 회원보다 실무자들의 수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연고적 동원이 운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일반 회원의 경우, 그것은 운동참여를 소극적, 수동적으로 만드는 데에 반하여, 실무자들에게는 개인적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공유한 운동경험'은 이념적 균열과 가치관의 대립까지 메꾸어주는 일종의 연대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고적 동원은 서구사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한국적 특성이자 자산이다. 그것은 신사회운동이라는 포스트모던적 현상에 여전히 전통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며, 쟁점 중심의 이합집산을 억제하고 직업운동가들간의 끈끈한 유대를 지탱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운동단체 내부에서 이런 형태의 연고적, 개인적 네트워크가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을 권위주의적으로 만들 우려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으로, 실무자들간 노선의 차이와 이념적 대립에서 기인하는 조직활동의 마비상황,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균열을 방지해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기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네트워크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경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짐을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사회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사회적, 공통적 관심사와 정책사안을 개발하는 일은 신사회운동이 초기적 형성단계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에서 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활동가들의 의욕을 북돋우는 세 가지의 협신기제(committment mechanism)를 충족시키는 기초작업에 해당한다. 활동가들의 참여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동기와 유인을 '협신기제'로 규정하면서 키트 웰트는 합목적적(purposive), 연대적(solidary), 물질적(material) 협신기제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활동가들과 핵심인물들이 끊임없는 좌절과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은 서구의 신사회운동 또는 그것에 기초한 신정치정당들의 협신기제 역시 대단히 취약함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5절에서 간략하게 논의한 세 가지의 당면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참고문헌

- 장문규(1996), 『시민참여의 시대』, 한울.
- 구도완(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 김성국(1996),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
- 김영래(1997), 『이익집단 정치와 이익갈등』, 한울
- 김용학 · 송호근, 『한국 노동조합의 연결망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박재묵(1995), “지역 반핵운동과 주민참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형신 · 한상필(역)(1995),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 한울
- 이신행(1997),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 이효선(1997), 『현대한국의 시민운동』, 집문당
- 조돈문 편저(1996a),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1996b),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II — 연대경험의 분석과 연대발전의 방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크리스찬아카데미 편(1996a), 『지방화와 지구화 그리고 시민운동』, 한울
- Garnson, William A. & David S. Meyer (1996), “Framing Political Opportunity,” Doug McAdam,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 Gusfield, Joseph (1981), “Social Movement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f Linearity and Fluidity,” in Louise Kriesberg (ed.),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Vol. 4, Greenwich, CT: JAI Press.
- Hilderbrandt, Kai, and Russell Dalton (1978), “The New Politics: political Change or Sunshine Politics?” in Max Kaase (ed.), *Election and Parties, London and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Inglehart, Ronald (1990), “Values, Ideology, and Cognitive Mobilization in New Social Movements,” in Dalton and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박 형신, 한상필 역)
- Jenkins J. Craig and Klandermans Bert (eds.) (1995), *The Politics of Social Protest*, London: UCL Press.
- Johnston Hank and Bert Klandermans (eds.) (1995),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London: UCL Press.

- Kitschelt (1990), "New Social Movements and the Decline of Party Organization of Left-Libertarian Parties," in Dalton, Russell and Manfred Kuechler (eds.) (박형신, 한상필 역).
- Klandermans, Bert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and Multiorganizational Fiel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Aldon D. Morris & Carol McCurg Mueller eds, Yale Univ. Press: New Haven and London.
- Kriesi, Hanspeter (1996),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New Social Movements in a Political Context," Doug McAdam,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1988), "Social movements," N. Smelser eds, *Handbook of Sociology*, Sage.
- _____, (1996),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es-toward a synthetic, comparative perspective on social movement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 McCarthy, John D. (1996),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in adopting, adapting, and inventing," Doug McAdam,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 Mueller-Rommel, Ferdinand (1990), "New Political Movement and Parties of 'New Politics,' in Western Europe," in Dalton Russell and Manfred Kuechler(eds.), op.cit.
- Neidhardt, Friedhelm (1985), "Einige Ideen zu einer Allgemeinen Theorie sozialer Bewegungen," in Stefan Hradil (ed.), *Sozialstruktur im Umbruch: Karl Martin Bolte zum 60. Geburtsta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Raschke, Joachim (1983), "Jenseits der Volkspartei," *Das Argument* 25: 54-65.
- Rochon, Thomas, R. (1990), "Peace movement in Western Europe and Theories of New Social Movements," in Dalton J. Russell and Manfred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Cambridge, UK: Polity Press.

abstract

The Analysis of Participants in the New Social Movements in Korea: Mobilization and Networks

Ho-Keun Song*

This study aims at illuminating individu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e New Social Movements (NSMs), and their motivation and networks they develop compared to Western European societies. This study analyzes survey data which contain various information on participa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 and the mechanics of mobilization the NSMs adopt to expand organizational resources. The analysis show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Western NSMs. Similarities are found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mbers in that young and highly educated peoples are overrepresented. But, woman participation is still limited in Korea.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is the pattern of mobilizing members and activists. Korea's NSMs rely mainly upon personal networks in mobilizing memberships in contrast to cognitive mobilization in Western societies. Personal network is more conspicuous in recruitment of leaders and activists than in mobilization of general members. This pattern of mobilization based on personal and individual relationships can be defined as 'personalized mobilization' in contrast to 'market mobilization' and 'cognitive mobilization' based on voluntarism and value orientation.

This pattern has two-faced impacts on the NSMs. It is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NSMs since personal and informal network weakens cognitive identity with movement goal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to raise 'issue politics'. Contrastingly,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inuity of organization since ideological conflict and value differences among leaders and activists can be easily resolved through personal ties and relationships. Ideological conflict do not end up with organizational breakdown or

paralyzing of social movements. Nevertheless, this pattern of mobilization still sets the limit on the advancement of Korea's NSM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s NSMs require 'socialization' of mobilization network beyond 'privatization' of personal network in order to be closer to the nature of 'issue politics'.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Sociology of Labor Markets, Social Policy, Social Theory

Major Publications: "Working Class Politics in Reform Democracy in South Korea" (1994)

"State and Wage Policy: Implication for Corporatism" (1996)

"Sociology of Work: A Winding Path to Industrial Democracy" (forthcoming)

E-mail: hksong@plaza.snu.ac.kr